

제354회 국회(정기회)

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
업 무 현 황

2017. 10. 31.



방송통신위원회

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

목 차

I. 일반 현황	1
II. 주요업무 추진 현황	3
1.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강화	3
2. 안전하고 공정한 방송통신시장 실현	7
3. 방송통신시장의 활력 제고	12
4. 전 국민 미디어 역량 강화	15
III. 주요 현안 과제	18
IV. 참고 자료	21

I.

일반 현황

□ 연 혁

- 2008. 2. 29. 방송통신위원회 설립
- 2013. 3. 23.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개편
- 2017. 8. 1.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 출범

□ 주요 업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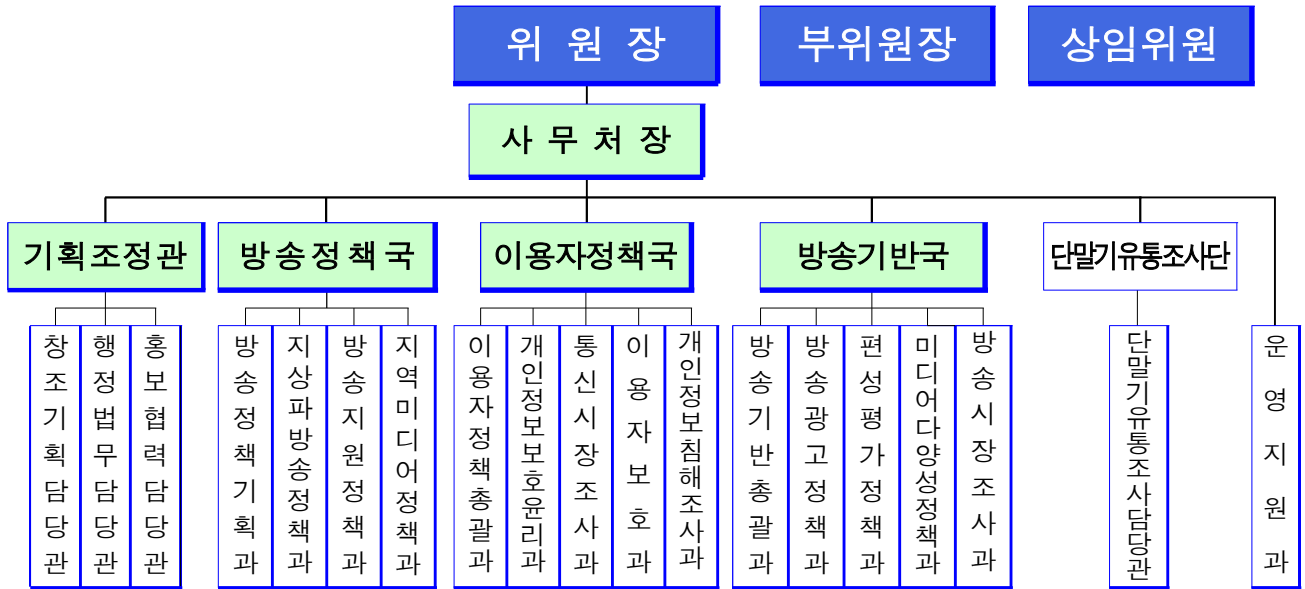
- 지상파 방송 및 종편·보도 방송 채널 관련 정책
 - 방송광고 정책, 편성평가 정책, 방송진흥 기획, 방송정책 기획
 - 방송통신 시장 조사 및 이용자 보호, 시청자 권익 증진, 개인정보 보호 및 인터넷 윤리에 관한 사항
 - 방송용 주파수 관리에 관한 사항 등
- ※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, 정보통신망 상의 불법정보 심의 등에 관한 사항은 ‘방송통신심의위원회’가 수행

□ 소관 법률

분 야	법 률 명
방 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• 방송통신 발전 기본법 (일부)• 방송법 (일부)• 한국교육방송공사법• 방송문화진흥회법• 지역방송 발전 지원 특별법•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•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(일부)
통 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전기통신사업법 (일부)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(일부)•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(일부)•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• 전파법 (일부)

□ 조직 및 정원

○ 조직 : 1처 3국 1관 19과(담당관)



○ 정원 ('17. 10월 현재)

계	정무직	고위 공무원단	3·4급	4급	4·5급	5급	6급 이하
226명	5	5	5	15	17	73	106

□ 예산 및 기금 : ('16년) 2,273억원 ⇒ ('17년) 2,393억원 [+120억원]

○ (재원) 일반회계 545억원, 방송통신발전기금 1,848억원

○ (기능) 인건비 173억원, 기본경비 42억원, 주요사업비 2,178억원

□ 주요 유관기관

기관명	대표자	주요기능	근거법률
한국방송공사 (KBS)	고대영	국가 기간방송으로서 국내·외 대상 방송 실시, 방송문화 보급 및 수반사업 등	방송법 제43조
한국교육방송공사 (EBS)	장해랑	교육·지식·정보·문화·교양 분야의 방송 콘텐츠 제공, 교육방송 관련 연구개발 등	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7조
방송문화진흥회	고영주	방송문화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연구 및 학술사업 수행 등	방송문화진흥회법 제5조
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(KOBACO)	곽성문	방송광고 판매 대행 및 방송광고 균형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 수행 등	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
시청자미디어재단	- (공석)	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수행 등	방송법 제90조의2

Ⅱ.

주요업무 추진 현황

1.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강화

1. 방송의 독립성 및 공정성 신장

□ 개 요

- 방송이 공정하고 올바른 여론형성에 기여하는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송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영방송 제도 개선 및 방송사업자의 공정한 재허가·재승인 심사 추진

□ 추진 실적

- (공영방송 제도개선)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공영방송의 공정성 보장 및 공적책무 강화를 위해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선 추진
 - 이사회 구성 방식 개선, 제작·편성 자율성 제고 등 법제화를 지원하기 위해 '방송미래발전위원회' 구성('17.10.19)
 - 수신료 산정 및 검증과정의 투명성·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'공영방송 수신료위원회' 설치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('17.6월~)
- (공정한 재허가·재승인 심사) 종편·보도PP 5개사('17.3월), 미디어렙 3개사('17.3월)에 대하여 엄격한 재허가·재승인 심사 실시
 - 연말에 심사 예정인 지상파방송 14개사·MBN 등의 세부 심사계획 의결('16.8월/'17.3월), 신청서 접수(5~6월) 및 시청자 의견 청취(8~9월)

종편·보도PP	TV조선, JTBC, 채널A, YTN, 연합뉴스TV (3월) / MBN (11월 심사예정)
미디어렙	JTBC미디어컴, TV조선미디어렙, 미디어렙A(3월) / MBN미디어렙 (11월 심사예정)
지상파	KBS, MBC, 지역MBC 3사(대전, 경남, 부산), SBS, EBS 등 (10~11월 심사예정)

□ 향후 계획

- 방송미래발전위원회 운영 : '17. 10월~'18. 1월
- 재허가·재승인 심사위원회 운영 : '17. 10~11월

2. 방송의 공적책임 제고

□ 개 요

- 방송의 공적책임 확보를 위해 신속하고 안전한 재난방송 체계 확립, 시청자 권익 보호 및 남북 방송통신 교류 활성화 등을 추진

□ 추진 실적

- **(재난방송 효율성 강화)** 재난방송에 재난유형을 추가(화생방, 민방위 등) 하고 효과적인 경보음 기준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'재난방송 매뉴얼 가이드라인'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('17.5월~)
 - 전국의 터널 등 재난방송 음영지역의 방송수신 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('17.5월~)
- **(시청자 권익 보호)** 미디어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시청자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반영할 수 있도록 시청자 위원회·시청자 평가프로그램 등 제도 개선 추진(연구반 구성·운영, '17.5월~)
 - 홈쇼핑PP의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 신설 관련 방송법 개정('17.3.14.)에 따라 관련 시행령('17.9.5.) 및 규칙 정비('17.9.12.)
- **(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)** 역량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방송광고 제작 및 송출을 지원하고, 맞춤형 컨설팅 실시(연중)
 - ※ '17년 103개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 지원(TV광고 56개사, 라디오광고 47개사)
- **(남북 방송통신 교류 사업 추진)** 남북 방송통신 교류에 대한 관심과 협력 유도를 위해 국제컨퍼런스를 준비하고, 민족 동질성회복을 위해 통일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사업 추진(공모를 통해 EBS 선정, '17.8월)

□ 향후 계획

- 재난방송 매뉴얼 가이드라인 마련 : '17. 12월
- 시청자 권익보호 관련 개선방안 마련 : '17. 12월
- 남북 방송통신 국제컨퍼런스 개최 : '17. 11월

3. 지역·중소 방송 활성화 지원

□ 개요

- 여론 다양성·지역문화 창달 등을 위해 지역·중소 방송사의 역할이 중요하나 방송의 영세성·광고 위축·인력 감소 등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활성화 지원을 추진

□ 추진 실적

- (고품질 프로그램 제작 등 지원) 지역·중소방송의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('16년 9억원 → '17년 12억원)하고, 프로그램 기획·제작·유통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맞춤형 멘토링 실시(연중)
- (지역방송 마케팅 지원) '지역방송 콘텐츠 유통 로드맵' 마련을 위한 지역방송 콘텐츠유통추진위원회 운영('17.3월~)
 - 부산 콘텐츠 마켓에 콘텐츠를 재제작(41개 프로그램, 영문자막·종합편집 등)하여 출품하고 지역방송관 운영('17.5월)
- (지역 민방 편성규제 개선) 지역민방의 경영 악화 등 제작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편성규제 개선을 위한 협의체(지역민방·학계·법조계) 구성·운영('17.6월~)

□ 향후 계획

- 지역방송 콘텐츠 유통 로드맵 마련 : '17. 12월
- 싱가포르 ATF(Asia Television Forum) 지역방송관 운영 및 마케팅 지원 : '17. 12월
- 지역민방 자체편성규제 개선(안) 마련 : '17. 12월

4. 미디어다양성 기반 구축

□ 개 요

- 고정형TV 위주의 시청점유율에 인터넷·모바일에서의 시청행태를 반영한 통합시청점유율 제도 도입 등 종합적인 미디어다양성 정책 수립

□ 추진 실적

- (통합시청점유율 도입 추진) 고정형TV와 스마트폰·PC의 시청행태를 모두 포괄하는 '통합시청점유율' 도입 추진
 - 통합시청점유율 전문가 연구반 운영('17.7월~)을 통해 도입방안 연구
- (미디어다양성 증진 종합계획 마련) 스마트미디어를 통한 시청 확대 등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에 맞게 시청점유율 상한(30%)제도 개선, 미디어다양성 조사 강화 등 정책방향 마련 추진
 - 전문가연구반 운영('16.9월~) 및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의견 수렴 실시(6회)
- (미디어다양성 조사) 미디어에서 여론의 다양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 등장인물의 성별·연령·직업 등을 조사하여 현실보다 편중되었는지 분석('17.9월)
 - 전체 채널(지상파/PP)의 다양성, 플랫폼(SO/IPTV/위성) 내 채널구성의 다양성 등도 조사

□ 향후 계획

- 미디어다양성 증진 종합계획 마련 : '17. 12월
- 통합시청점유율 도입 방안 마련 : '17. 12월
- '17년도 하반기 미디어다양성 조사 결과 발표 : '18. 3월

2. 안전하고 공정한 방송통신시장 실현

1. 방송통신시장 공정경쟁 촉진

□ 개요

- 방송사-외주제작사, 홈쇼핑-납품업체, 포털-콘텐츠제작사 등 방송통신 분야의 고질적 갑-을 관계를 해소하고,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응하여 공정한 방송통신시장 환경 구축

□ 추진 실적

- (외주제작환경 개선) 방송사-외주사 간 외주제작 관련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방통위·문체부·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실태조사('17.8월~)
 -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간 제작비 지급, 저작권 배분, 표준계약서 사용, 외주제작 근로 환경 등 중점 조사
- (방송사업자 불공정행위 개선) 홈쇼핑사, 유료방송사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시정 조치
 - 홈쇼핑사의 납품업체에 대한 상품판매방송 사전영상 제작비용 부당 전가 등 불공정 관행 실태점검 및 시정('17.9월)
 - ※ 7개 TV홈쇼핑사에 대해 제작비의 부당한 전가행위 중지를 명령하고, 제작비의 부담주체 및 부담 비율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제도 개선 권고
 -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유료방송 단체수신계약 관련 개별가입자 동의, 해지절차, 계약 내용 고지 등에 대한 준수사항 실태점검 실시('17.5월~)
 - 유료방송사의 PP에 대한 채널계약 평가기준 미공개, 평가결과 통보 여부 등 계약 절차 위반행위 점검('17.8월~)

- (통신시장 공정경쟁 기반 조성) 대규모 통신사업자의 중소 사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행위 방지를 위한 법제도 정비
 - 포털사업자와 중소 콘텐츠사업자 간 거래시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·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('17.9월~)
 - 전기통신사업자 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·제한 부과에 부당한 행위에 대한 세부기준(방통위 고시) 제정('17.8월)
- (중소 유통점 지원 확대) 경쟁력이 약한 영세 유통점을 지원하기 위해 통신사와 중소 유통점 간 상생방안 마련
 - 이통사의 유통점에 대한 자율제재 수준 완화 등 부담을 경감하고('17.4월), 유통점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이통사의 전산휴무 확대(2·4주 일요일→매주 일요일)('17.7월~)
- (이용자 피해 방지) 이용자들이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며 실질적으로 불편을 느끼는 부분을 집중 점검하여 개선 추진
 - 전기통신서비스(LTE 등) 품질 관련 중요사항 미고지 행위 조사 및 개선권고('17.3월)
 - 인터넷 이용시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실태점검 및 즉시 시정(2개사, '17.4월)
 - 이통사의 약정할인 기간만료 사실에 대한 이용자 고지여부 실태를 점검하고 업무처리 절차 개선('17.8월), 모바일 유료앱의 해지 절차 조사 및 해지 기능이 없는 음원제공사업자 등 시정(7개사, '17.9월)

□ 향후 계획

- 공동주택 유료방송 단체수신 계약 제도개선 : '17. 11월
- 방송사-외주사 간 외주제작 거래 관행 개선방안 마련 : '17. 12월
- TV홈쇼핑사 시정조치 관련 재발방지대책 및 제도개선방안 마련 : '17. 12월
- 금지행위 제도개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제출 : '18. 3월

2. 이동통신시장 안정화

□ 개 요

- 단말기유통법상 지원금 상한제 폐지, 분리공시제 도입 등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단말기 구매비용 경감 등 이동통신시장 안정화 대책 추진

□ 추진 실적

- (지원금 상한제 폐지 대응) 지원금 상한제 폐지('17.10.1)에 대응하여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전국상황반 운영(9.15~10.31) 및 제도보완
 - 공시지원금 변동상황을 점검하고, 필요시 공시주기(7일)를 조정
 - 상한제 폐지에 따른 단말기유통법 하위 고시* 정비('17.10.1 시행)
 - * 긴급중지명령 처리 규정,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,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 개정·폐지
- (분리공시제 도입) 분리공시제 도입에 대비(의원발의 6개 법안 국회 계류중) 하여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방안* 마련('17.8월)
 - * 제조사 자료제출 의무 유지, 과도한 장려금으로 인한 불법지원금 지급 단속 강화
- (국내·외 단말기 출고가 비교 공시) 프리미엄 단말기의 국내외 출고가 비교 공시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 및 예산(2.46억원) 확보 추진('17.8월~)
- (시장조사 강화) 집단상가, 온라인 등 법준수 취약 지역에 대한 조사 강화('17.5.25~9.30) 및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통사·대규모 유통업자의 조사 거부·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제재수준 강화('17.9.5 시행)

□ 향후 계획

- 위법행위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전국상황반 운영 : '17. 11월
- 분리공시제 도입을 위한 단말기유통법 개정 지원 : '17. 10월~
- OECD 주요국 등 국내·외 단말기 출고가 비교 공시 : '18년

3. 이용자 보호 강화

□ 개 요

- 통신서비스가 다양화되고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 등장으로 이용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제도 개선 및 보호환경 조성

□ 추진 실적

- **(리콜 관련 이용자보호)** 유·무선 단말장치 리콜 시 피해보상 등 이용자 보호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마련('17.9월)

※ 방통위·과기정통부 공동으로 「이동통신 단말장치 리콜 가이드라인」 마련('16.12월)

- **(분쟁해결 강화)** 통신사업자 대상 분쟁해결 사례 공유 등 알선·재정 제도를 활성화하고, '통신분쟁조정 제도' 도입 추진(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, '17.9월~)

※ 재정 처리현황 : 16건('14년) → 63건('15년) → 20건('16년) → 43건('17.9월)

- **(불법 유해정보 유통 방지)** 인터넷방송 사업자 등에 음란정보 차단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, 웹하드·P2P 등 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의무화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

- 불법촬영 등 인권침해성 영상물에 대해 집중 단속 및 차단 강화('17.8월~)

※ 52개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점검, 인권침해 영상물 총 2,872건 삭제확인

- **(불법 스팸 대응 강화)** 불법 스팸에 대한 실시간 차단 서비스를 음성스팸까지 확대하고, 스팸 간편신고 대상을 웹팩스까지 확대('17.3월~)

□ 향후 계획

- 음성스팸 실시간 차단, 웹팩스 스팸 간편 신고 서비스 운영 : '17. 12월

- 리콜 및 분쟁해결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제출 : '18. 3월

4. 개인·위치정보 보호환경 구축

□ 개 요

- 개인정보 활용 확산에 따라 교육 및 자율규제를 활성화하는 한편, 사업자 점검·조사 등 사후관리를 통해 개인·위치정보 보호환경을 조성

□ 추진 실적

- (선도적 제도개선) 지문·홍채 활용서비스 확산에 따른 생체정보보호 제도 정비, 보호조치 미흡 시 개인정보 국외이전 중단명령권 신설 추진
 - 스마트폰 앱의 접근권한 설정을 통한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 제도 시행 및 '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 안내서' 마련('17.3월)
 - 위치정보 오·남용행위에 대한 효과적 제재를 위해 시정조치,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위치정보법 개정 추진(법제처 심사중)
- (교육 및 자율규제 확대) CEO·CPO·소상공인 등 사업자와 학생·노령층 등 이용자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 강화
 - ※ 이용자·사업자 대상 오프라인 교육 5만4천명, 온라인 교육 약 2만명 실시('17.8월 기준)
 -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수준 향상을 위해 통신사·쇼핑몰(66개사) 대상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시범운영 실시('17.6월)
- (조사 및 행정제재) 개인정보 유출사업자(빗썸, 알뜰즈 등)에 대한 조사 및 숙박앱(여기어때) 행정제재*('17.9월)
 - * 과징금 3억100만원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 최초로 책임자 징계 권고 등
 - 결제대행사·O2O·가상통화 취급업자 등 취약 분야 기획점검 실시(연중)

□ 향후 계획

- 위치정보법 개정(안) 국회 제출 : '17. 12월
- 생체정보 가이드라인 마련 : '17. 12월

1. 방송콘텐츠 제작·유통 기반 강화

□ 개요

- 방송콘텐츠 제작비 상승과 방송광고시장 위축, 중국의 한한령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방송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작기반 강화

□ 추진 실적

- (방송광고 제도 개선) 방송광고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광고총량제 이후의 방송광고 효과 분석 실시
 - 방송광고 제도개선 정책연구('17.5월~) 및 제도개선 방향 마련을 위한 전문가* 의견청취('17.7월~9월)
 - * 광고산업활성화전문위원회('17.7월),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('17.9월)
- (콘텐츠 경쟁력 강화 지원) 한류 방송콘텐츠 제작 및 수출환경 개선을 위한 지상파·외주사·학계 등 '정책자문단' 운영('17.2월~)
 - 국내 사업자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동남아 5개국 방송시장현황 현지 조사 및 국내외 포맷 표절 사례집 발간을 위한 정책연구 실시
- (국제협력 강화) 중국의 규제 강화에 대응하여 동남아시아·이슬람권 등으로 공동제작협정 체결을 확대하는 등 한류 저변 확대
 - 인도네시아, 태국, 터키 등과 방송콘텐츠 MoU 체결('17.2월)
 - 한-인니/한-베/한-태 공동제작 연구반 회의 개최('17.2월/6월/9월)

□ 향후 계획

- 공동제작협정 체결 추진 : '17. 10월~
- 방송콘텐츠 교류 활성화 국제포럼 개최 : '17. 11월
- 방송광고 제도 개선 방안 마련 : '17. 12월

2. 신규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기반 마련

□ 개요

- 세계 최초로 개시한 지상파 UHD 방송 현황을 점검하고, 시범방송 중인 EBS 다채널방송 본방송 전환을 위한 법적 근거와 활성화 방안 마련
- OTT·웹콘텐츠 등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 등장에 따라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추진

□ 추진 실적

- (지상파 UHD 방송의 안정적 도입) 지상파 UHD 방송의 기술적 문제 해결 등을 위한 '도입상황 점검 TF' 운영(17.2월~) 및 정책연구 실시(17.5월~)
 - 수도권에 지상파 UHD 방송을 개시(17.5월)하고,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광역시·평창 일원으로 2단계 신규 허가 실시(17.9월)

1단계	· '17.5월 수도권 KBS·MBC·SBS 개시
2단계	· '17.12월 광역시권(부산·대구·광주·대전·울산) 및 평창·강릉 지역 개시
3단계	· '20년 ~ '21년 시·군 지역 등 전국 확대

※ 과기부 주관의 'ICT올림픽 추진TF'에 참여하여 UHD 방송 시연 및 홍보방안 논의

- (MMS 본방송 도입 준비) EBS-2TV 본방송 전환을 위한 방송법 개정 추진(~17.12월)
 - MMS 채널의 공익적 필요성과 채널 차별화(융합형 교육 콘텐츠 등) 등 EBS의 2TV 본방송 도입계획 마련 및 프로그램 제작 지원(17년 50억원)
- (인터넷·모바일 기반 신유형서비스 제도 정비) OTT 등 새로운 융합 서비스의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과제 수행(17.6월~)
 - VOD광고 등 신유형 광고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위한 연구반 운영(17.6월~)

□ 향후 계획

- 지상파 UHD 방송 광역시 및 평창 일원 방송 개시 : '17. 12월
- MMS 관련 방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지원 : 연중
- OTT 등 융합서비스 제도 개선 정책연구 결과보고서 발간 : '17. 12월

3. 안전한 개인·위치정보 이용환경 조성

□ 개 요

- 빅데이터·IoT 등 기술 발달과 맞춤형 서비스 증가로 개인·위치정보를 활용하는 신규 서비스가 더욱 확대됨에 따라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

□ 추진 실적

- (사전동의 예외 합리화) 개인정보 활용이 불가피한 경우를 사전동의의 예외로 추가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이용자의 실질적인 동의 체계를 구축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회 제출('17.3월)

- (본인확인수단 확대) 신용카드 등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 도입을 위한 신용카드사 시범서비스 실시('17.9월)

- (국제협력 강화) 개인정보 국외이전 및 침해 시 피해구제 등 협력 강화를 위해 아·태지역 개인정보보호 인증체계인 APEC CBPR*에 가입('17.6월)하고 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후속절차 추진

* CBPR (Cross-Border Privacy Rules) : 개인정보보호 인증체계로 美, 日 등 가입

- (위치정보 산업 활성화) 위치정보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비즈니스 모델 발굴 공모전을 실시('17.6월)하고 우수모델의 사업화를 지원('17.7월~11월)

- 법제도·기술·경영 분야 전문 컨설팅, 동향조사, 특허출원 및 창업교육 등 사업화 지원 분야 및 대상 확대(지원 예산 '16년 25억원 → '17년 12.7억원)

□ 향후 계획

-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 : '17. 12월
- APEC CBPR 인증기관 지정 승인 신청 : '17. 12월

1. 보편적 미디어교육 확대

□ 개요

- 디지털 시대 미디어는 소통·지식습득 등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서, 미디어 격차를 해소하고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 보편적 미디어교육 추진

□ 추진 실적

- **(맞춤형 미디어교육)** 생애주기별·계층별·지역별로 미디어의 이해와 활용, 참여능력 제고를 위한 미디어교육 실시
 - 어린이·청소년·노인·주부·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미디어의 이해와 활용 및 제작을 위한 보편적 미디어교육 실시
 -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의 관심사를 함께 나누는 생활미디어를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마을미디어교육 실시('17년 21개마을 시범운영)
- **(미디어 창의인재 교육)** 지능정보사회 핵심역량을 갖춘 미디어 창의인재 교육을 위해 자유학기제 미디어교육, 동아리미디어교육, 대학생 학점인증 교육 과정 확대('16년 201개 → '17년 295개교)
 - 방송 체험 및 상영 등이 가능한 '찾아가는 미디어나눔버스'를 제작하여 농·산·어촌 등 미디어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체험교육 실시('17년 30회)
 - 1인 미디어, VR 등 신기술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신설과 드론 활용 교육 확대('16년 2개 센터 → '17년 7개 센터)

□ 향후 계획

- 미디어교육 추진 : 연중

2.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 증진 및 윤리 수준 향상

□ 개 요

-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해 임시조치 등 제도를 개선하고, 사이버폭력·스마트폰 과의존 등 역기능 최소화를 위한 윤리 교육 확대

□ 추진 실적

- (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) 포털 등의 '임시조치'에 대해 정보계재자의 반론기회를 부여하는 등 온라인 게시물 임시조치 제도개선 추진('17.8월~)
 -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에 대한 자율규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방심위, 사업자, 인터넷자율기구(KISO) 등 의견 수렴('17.9월~)
- (생애주기별·맞춤형 윤리 교육) 가정 내 '밥상머리 인터넷 윤리교육'을 대상별(유아·초·중·고등, 학부모) 맞춤형 교육으로 확대(연간 5만명→6만명)
 - 인형극, 창작음악제, 인터넷드림단 등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실천형·체감형 교육 심화
- (청소년 스마트폰 이용환경 개선) 청소년·교사·학부모 등이 연계하는 스마트폰 중독 예방 '사이버안심존서비스' 확대('16년 531 → '17년 760개교)
- (지능정보사회의 윤리 기준 마련) AI·빅데이터 등 환경변화에 맞추어 공급자·개발자에게 필요한 윤리 기준 마련(정책연구, '17.5월~)

□ 향후 계획

- 정보통신망법 개정안(임시조치, 정치적 표현 자율규제 등) 수정대안 마련 : '17. 12월
- 지능정보사회의 윤리 기준 마련 : '17. 12월

3.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확대

□ 개 요

- 시·청각 장애인 등 방송취약계층이 방송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송접근권을 확대하여 정보격차 해소

□ 추진 실적

- (시·청각장애이용 TV 보급) 저소득 시청각장애인 위주로 수신기를 보급하기 위해 광역지자체와 업무협약 확대(12개→17개 시·도)
 - 사용만족도 조사 결과 및 장애인단체·제조사 의견을 반영하여 TV의 기능을 개선하고 보급대수 확대('16년 15만대→ '17년 16.2만대 누적)
- (장애인방송 품질 제고) 장애인방송 제작 시 준수사항 등 방송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반 운영 및 정책연구('17.2월~)
- (장애인방송 환경 개선) 시청각장애인의 방송이용 편의를 위해 스마트 수어방송 및 음성안내서비스 기반 구축
 - 청각장애인과 일반인 모두의 TV시청 편의를 위해 수어방송의 영상을 생성·제거, 크기·위치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 수어방송 시범방송을 실시('17.7월~12월)
 - 시각장애인에게 채널전환, 프로그램명, TV메뉴 등을 음성으로 설명하는 음성안내 시범서비스 사업자 선정('17.8월~)

□ 향후 계획

- 음성안내 시범서비스 개시 : '17. 11월
- 장애인방송 제작 가이드라인 마련 : '17. 12월

Ⅲ.

주요 현안 과제

① 방송사-외주제작사 간 공정거래 환경 조성

□ 개 요

- 독립PD 사망사건으로 불거진 방송사-외주제작사 간 불공정거래 관행 논란에 대한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 필요
- 방송사에 대한 외주제작물 편성규제를 담당하는 방통위와 외주사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문체부 등과 공동으로 실태조사 실시

□ 주요현황

- 조사대상 : KBS, MBC, SBS, EBS, 종편PP, CJ E&M 및 외주제작사
 - ※ 외주제작사는 문체부 주관으로 외주제작 관련 3개 협회(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(29개사), 한국독립PD협회(320명),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(142개사)) 등 540여개 사업자
- 조사절차 및 기간 : 방송사 및 외주제작사를 대상으로 서면 설문 조사 및 주요 불공정 사례중심의 현장방문 등을 추진('17.8 ~ 11월)
- 조사내용 :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간 제작비 지급, 저작권 배분, 표준 계약서 사용, 외주제작 인력의 과도한 노동시간, 부당한 근로환경 등
- 추진체계 : 방통위·문체부·과기정통부·노동부·공정위 공동으로 「외주제작 제도개선 협의체(국장급)」 및 「실무협의회(과장급)」 구성('17. 9월)

□ 향후 계획

- 방통위·문체부·과기정통부·노동부·공정위 공동으로 「외주제작 제도개선 협의체」 구성 및 부처별 소관업무를 중심으로 개선방안 마련

②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대책 추진

□ 개 요

- 최근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위장한 몰래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영상물이 인터넷에 급속하게 확산됨에 따라, 피해자의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*을 마련 시행

* 디지털 성범죄(몰래카메라 등) 피해방지 종합대책(9.26, 국무회의 보고)

□ 주요 내용

○ 불법영상물의 신속한 차단·삭제

- 웹하드사업자 등 불법영상물 유통에 대한 집중 점검('17.10~12월)
 - ※ 지난 8월 웹하드사업자 집중모니터링 결과, 불법음란물 2,872건 즉시 삭제
- 피해자 요청시 사업자의 선차단 자율규제 및 방심위의 긴급심의 실시
- 경찰청과 불법정보 공조시스템(핫라인)의 구축 추진('18년)

○ 법·제도 정비

- 개인인터넷방송 등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음란물 유통사실 인지시 삭제·접속차단 등 의무 부과('16.12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제출)
- 웹하드 업체 메인화면에 불법촬영물 유포시 처벌 등 경고문 게시
- 불법영상물의 삭제 등 사업자의 자율심의협력시스템* 참여 확대
 - * 네이버, 카카오, 구글, 페이스북, 트위터 등 39개 사업자 참여(텀블러 참여 촉구)

○ AI 등 활용 유포·탐지·차단 신기술 개발(과기정통부 공동, '19년까지)

- 불법영상물의 편집·변형 재유통을 차단하는 DNA필터링 기술적용('18년)

□ 향후 계획

- 불법영상물 집중점검 단속 및 행정처분 : '17. 10~12월
- 전기통신사업법(차단의무 부과) 개정 : '17. 12월

③ 방송사업자 재허가·재승인 심사

□ 개 요

- 지상파방송 및 보도·종편PP는 허가유효기간(3~5년) 이후 방송법 제17조(재허가 등)에 따라 재허가·재승인을 받아야 하며, 방통위는 동법 제10조(심사기준·절차)에 따라 방송의 공적 책임 등을 심사하여야 함

□ 주요 내용

○ 17년 하반기 재허가·재승인 대상 사업자

- KBS, MBC, SBS, EBS 등 중앙방송사를 포함해 14개 지상파방송사업자 (147개 방송국), 마포FM 등 7개 방송국(공동체라디오방송), MBN(종편PP)

○ 그간의 경과

- '17. 3. 24. : TV조선, JTBC, 채널A, YTN, 연합뉴스TV 재승인 의결
- '17. 5~6월 : 재허가·재승인 신청서 접수
- '17. 7~10월 : 시청자 의견 접수, 기술심사 등

○ 심사기준

- 방송법 제10조(심사기준·절차)에 따라 방송의 공적 책임·공정성·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등을 심사

< 재허가·재승인 심사 기준 >

①방송의 공적 책임·공정성·공익성의 실현 가능성, ②방송프로그램의 기획·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정성, ③지역적·사회적·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, ④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, ⑤재정 및 기술적 능력, ⑥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, ⑦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

□ 향후 계획

- 재허가·재승인 심사위원회 운영 : '17. 10~11월
- 재허가·재승인 의결 및 심사결과 통보 : '17. 11월

IV.

참고 자료

1 2017년 입법계획

□ 국회 제출 법안

연번	법률명	주요 내용	추진일정
1	방송법 (일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방송법과 IPTV법 통합 (IPTV법은 폐지) ○ 유료방송(SO·위성·IPTV) 사업자간 '동일서비스 동일규제' 적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회 제출 : '16. 6. 17. ○ 시행일 : 공포 후 12개월
2	정보통신망법 (일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임시조치에 대한 정보계재자의 이의제기 절차 신설 ○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율적 임시조치에 대한 책임 감면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회 제출 : '16. 6. 29. ○ 시행일 : 공포 후 6개월
3	방송법 (일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상파다채널방송(MMS)의 법적 지위 및 승인근거 마련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회 제출 : '16. 11. 3. ○ 시행일 : 공포 후 6개월
4	전기통신사업법 (일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피조사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방안을 제안하고 시정방안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의결 제도 도입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회 제출 : '16. 12. 6. ○ 시행일 : 공포 후 6개월
5	정보통신망법 (일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개인정보 처리정지권 신설 및 국외 이전 제도보완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회 제출 : '17. 3. 8. ○ 시행일 : 공포 후 6개월

□ 제출 예정 법안

연번	법률명	주요 내용	추진일정
1	위치정보법 (일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위치정보 규제를 현실에 맞게 합리화하고 정보통신망법과의 정합성을 제고 - 사물위치정보사업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, 소규모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간주제 도입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회 제출 : '17. 12월 ○ 시행일 : 공포 후 6개월

② 2017년도 세입·세출 예산 개요

1. '17년도 세입예산 및 기금수입계획

◇ ('16년) 11,778억원 → ('17년) 10,146억원 ('16년 대비 △1,632억원, △13.9%)

□ (일반회계) '17년도 312억원, '16년도 대비 251억원 (△44.6%) 감소

- 단말기 유통법 시행과 통신시장 안정화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감소로 과징금 등 수입 감소 (559 → 308억원, △251억원)
- 전년도 사업비 정산잔액 등 경상이전 수입비 (4 → 4억원)

□ (방발기금) '17년 9,834억원, '16년도 대비 1,381억원 (△12.3%) 감소

- 주파수할당대가 3,801억원(△1,268), 방송사 분담금 2,034억원(△226), 용자원금회수 및 기타수입 428억원(△19) 등 자체수입 6,263억원(△1,513)
- 공자기금 회수 2,000억원(+600), 이자수입 42억원(△6) 등 정부내부수입 2,042억원(+594) 및 여유자금 회수 1,529억원(△461)

※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통위, 과기정통부 공동관리

< '17년도 세입 및 수입 현황 >

(단위 : 억원)

세 입 과 목	'16년 예산(A)	'17년 예산(B)	증 감	
			B-A	%
합 계	11,778	10,146	△ 1,632	△ 13.9
□ 일반회계	563	312	△ 251	△ 44.6
○ 과태료 및 과징금	559	308	△ 251	△ 44.9
○ 기타경상이전수입(정산잔액, 이자반납 등)	4	4	0	0.0
□ 방송통신발전기금	11,215	9,834	△ 1,381	△ 12.3
○ 자체수입				
법정분담금(주파수할당대가, 분담금)	7,329	5,835	△ 1,494	△ 20.4
용자원금회수 및 기타수입 등	448	428	△ 20	△ 4.5
○ 정부내부수입(공자기금 회수 등)	1,448	2,042	594	41.0
○ 여유자금 회수(전년도 결산 이월금)	1,990	1,529	△ 461	△ 23.2

2. '17년도 세출예산 및 기금 지출계획

◇ ('16년) 2,273억원 → ('17년) 2,393억원 ('16년 대비 +120억원, +5.3%)

□ (재원) 예산 545억원 ('16년 △11), 기금 1,848억원 ('16년 대비 +131)

□ (분야) 통신 633억원 ('16년 대비 +38), 방송 1,761억원 ('16년 대비 +83)

□ (기능) 인건비 173억원, 기본경비 42억원, 사업비 2,178억원

< '17년도 세출 및 지출 현황 >

(단위 : 억원)

구 분		'16년 (A)	'17년 (B)	증 감	
				B-A	%
합 계		2,273	2,393	120	5.3
재 원	□ 일반회계	556	545	△ 11	△ 2.0
	□ 방송통신발전기금 (기금 총계=사업비+내부지출+보전지출)	1,717 (11,469)	1,848 (9,834)	131 (△1,635)	7.6 (△14.3)
	○ 사업비	7,904	7,585	△ 319	△ 4.0
	- 방송통신위원회	1,717	1,848	131	7.6
	- 과학기술정보통신부	6,187	5,737	△ 450	△ 7.3
	○ 정부내부지출(공자기금예탁)	1,000	1,000	-	-
	○ 보전지출(여유자금 운영 등)	2,565	1,249	△1,316	△51.3
분 야	□ 통 신	595	633	38	6.4
	□ 방 송	1,679	1,761	82	4.9
기 능	□ 인건비	167	173	6	3.6
	□ 기본경비	42	42	-	-
	□ 사업비	2,064	2,178	114	5.5
	○ 방송인프라 지원 및 시청자 권익증진	1,154	1,201	47	4.1
	○ 공정경쟁 및 안전한 정보이용환경조성	234	255	21	9.0
	○ 미디어 다양성 및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	627	667	40	6.4
	○ 방송통신 운영지원	49	55	6	12.2